

지방자치론

이동호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베리타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울시 지방자치론 시험 문제

01. 1.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 ②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 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02.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
- ②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03.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④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04. 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① 민간위탁(contracting-out) 방식
- ② 보조금(subsidy)지급방식
- ③ 증서(vouchers)제공 방식
- ④ 지정(franchises) 방식
- ⑤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한 방식

해설 ③

설문에서 “증서”가 키워드다.

0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 ③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 ⑤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해설 ⑤

- ①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사법권은 제한적이라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권한이다.
- ②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고 있다.
- ③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불가능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06. 다음 중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 ②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 ③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④ 자치행정방식은 간접행정방식에 해당한다.
- ⑤ 중앙정부에서 국토관리, 환경관리, 중소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일선 집행기관을 설치해 처리하는 행정도 지방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설 ③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자치행정, 관치행정, 자치·관치 2원형 지방행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07. 다음 중 미국의 헌장제정 방식 중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州)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부여하는 방식이다.
- ②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③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이다.
- ④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 ⑤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④

- ① 특별헌장(Special charter)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일반헌장(general charter)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분류헌장(classified charter)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인 일반헌장의 단점에 해당한다.

08.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②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의원들이 직접 행정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 ④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 ⑤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해설 ①

②, ③, ④, ⑤는 기관통합형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09.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② 단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④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간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조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 ⑤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도와 군의 구역은 너무 넓어서 생활의 불편과 참여의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해설 ②

②도 정답이 될 소지가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행정계층 간 의사전달 왜곡현상 보다는 중앙의 시책이나 지침이 여러 행정계층을 거쳐 주민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거꾸로 주민의 의견이 행정계층을 거쳐 중앙부처에 이르는 과정에서 왜곡 전달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여진다.

10.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②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③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④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 ⑤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해설 ③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11.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세출구조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 ③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 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설 ⑤

-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와는 무관하다. 재정규모가 작아 자치단체에 부과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재정자립도만 높다고 재정상태를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만 고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력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지방채 수입을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산입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지방채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자체재원에 포함되는데 지방채수입은 장차 이를 상환해야 하는 외부의존재원이므로 자주재원에서 제외되어 계상되어야 한다.
- ④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총재원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12.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은 해임이 확정된다.
- ②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설 ②

- ①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 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③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 ④ '지방분권특별법'(2004. 1.)에서 도입을 명문화해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었고, 2007년 5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 ⑤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3. 아른스타인(Arnstein)의 참여단계론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 ① 교정단계(therapy)
- ② 정보제공단계(informing)
- ③ 유화단계(placation)
- ④ 계도단계(manipulation)
- ⑤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해설 ④

계도·조작(manipulation)단계는 참여를 흉내 낸 것일 뿐 주민은 행정의 의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단계이다. 행정이 일방적인 입장에서 주민을 교육시키고 지시하며 계도하고 있는 것이다.

14. 다음 중 현행법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로 규정된 것은?

- ① 등록면허세
- ② 담배소비세
- ③ 자동차세
- ④ 레저세
- ⑤ 지역자원시설세

해설 ⑤

지방세로써 목적세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15.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상관이 없는 것은?

-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

해설 ②

②는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16. 광역행정의 방식 중 연합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복합사무조합
- ② 일부사무조합
- ③ 사무위탁
- ④ 공동기관

⑤ 연락회의

해설 ①

연합 방식으로는 자치단체연합체, 도시공동체, 복합사무조합 방식이 있다.

17. 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②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를 반영한다.
- ③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한다.
- ④ 직업적 책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윤리에 따르는 직책수행과 관련이 있다.
- ⑤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해설 ③

행정책임은 행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며, 특히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원인·동기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18.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해설 ②

안전행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맞는 표현이다.

19.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세는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이다.
- ②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징수된다.
- ③ 지방세는 응징성이 강조된다.
- ④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⑤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였다.

해설 ①

주민세는 시·군세와 특별시·광역시세의 보통세이다.

2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주민이 될 수 없다.
- ③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뿐이다.
- ④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公民)과 같은 개념이다.

해설 ①

- ② 주민은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한다. 따라서 한정치산자·금치산자도 주민이 될 수 있다.
- ③ 주민의 권리·의무의 성립요건인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

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지(공법상 주소)를 의미한다.

민법상 주소에 있어서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주소가 인정된다. 일정한 경우 거소나 거주소도 주소로 인정되고 있다.

④ 전체로서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주체가 되어 정치적 통일체의 형태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⑤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公民)과 구별된다. 공민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과 거주기간을 가져야 하며 금치산자가 아닌 자연인이어야 한다.